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20지역언론 토크_12월4주(2)>

전봉민 의원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

지역언론 관심 보궐선거 셈법에만 머물러선 안 돼

표 1 12/21~12/28 '전봉민 의원' 관련 지역언론 보도 목록

지난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1대 국회의원 재산 1위인 전봉민(부산시 수영구) 의원의 재산 형성과정을 밀착 취재했는데,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는 전봉민 의원의 부친인 이진중 합건설 전광수 회장이 기자에게 3,000만 원을 제시하며 보도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전광수 회장의 시대착오적인 언론 대응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봉민 의원은 국민의힘 당을 탈당하며 아버지의 '3천만 원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가 제기한 의혹은 비단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에만 국한돼 있진 않았는데, 초고층 아파트 '이진베이시티'의 인허가 과정 중 민간기업이 제출한 경제성 분석자료가 추가 검증 없이 통과된 것을 짚었고 무엇보다 전봉민 의원이 시의원 당선 이후 이진중합건설의 매출이 급증했으며 당시 전봉민 의원은 2008년부터 2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도 변경 등을 관할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상임위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짚은 겁니다.

전봉민 의원의 재산 형성과 아파트 인허가 과정 등에 제기된 각종 의혹,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스트레이트> 방영 이후 일주일간(12/21~12/28) 지역언론 보도를 파악해 봤습니다. 신문은 지면기사, 방송은 지역 저녁뉴스 기준입니다.

날짜	매체	제목
12/22	부산일보	전봉민 부친, 기자에 "3000만 원 줄게"(5면)
12/22	국제신문	전광수 회장 "3000만 원 줄게"...편법증여 의혹 보도 무마 청탁(4면)
12/22	KBS부산	전봉민 의원 탈당..."엄정 수사 촉구"(리포팅)
12/22	부산MBC	전봉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자진 탈당(단신)

12/22	KNN	‘재산형성 의혹’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탈당(단신)
12/23	부산일보	전봉민에 맹공 퍼붓는 민주당 “의원직 내놔라”(5면)
12/23	부산일보	[사설] 전봉민 의원 부자 비위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라(23면)
12/23	국제신문	부 편법증여로 재산 증식 의혹..전봉민 국민의힘 탈당(5면)
12/24	부산일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도덕성 검증’ 변수(6면)
12/24	국제신문	‘전봉민 사건’ 부산시장 보선판 흔들 핫이슈 부상(3면)
12/24	KBS부산	국회의원 모친이 해변에 초고층 추진...특혜 우려(리포팅)
12/25	국제신문	“언론 입막음’ 전광수 회장, 수영문화원장 부적절”(6면)
12/28	국제신문	앞서 달리는 야당, 추월 노리는 여당(1면)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전광수 회장의 ‘3000만 원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올려 강조했는데요. 전봉민 의원 일가에 초점 맞춰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전했지만, 구조적 문제인 인허가 심의위원 구성, 고위공무원과 지역토호 세력 유착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제신문은 전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이진종합건설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23일부터는 재산형성 과정 의혹 전달 이외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지역신문은 전봉민 의원 일가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해당 의혹으로 인한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 그중에서도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부산일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도덕성 검증’ 변수>(12/24)와 국제신문 <‘전봉민 사건’ 부산시장 보선판 흔들 핫이슈 부상>(12/24)은 ‘전봉민 의원 사건’이 내년 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의 조사단을 꾸린 것을 두고, 부산일보는 ‘불리한 현 선거 구도를 부자 정당, 비리 정당과의 대결 프레임으로 전환 가능성’, 국제신문은 ‘상대적으로 열세인 부산 보궐선거판의 국면 전환용’이라 해석하며 제기된 의혹보다는 ‘전봉민 의원 사건’이 불러올 파장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일보는 사설 <전봉민 의원 부자 비위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라>(12/23)를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힘이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며 그게 공당의 자세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봉민 의원 사건’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KBS 부산의 <국회의원 모친이 해변에 초고층 추진...특혜 우려>(12/24)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부산의 또 다른 건설사 출신 정치인, 이주환 의원 일가의 송도 해안가 개발 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전봉민 의원의 재산형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슈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다른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이번 의혹이 비단 특정 정치인 일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짚은 정치 권력 감시에 충실한 보도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전봉민 의원’에 대한 지역언론과 전국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지역언론이 지역정치인에 대한 감시 역할에 소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9월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당선 전후 재산 차액 현황’에 따르면 지역 의원 중 4명이나 당선 전후 재산이 10억 이상 차이 난다고 밝혀졌음에도 이를 전한 지역의 기사는 <총선 전후 재산 ‘10억 이상 증가’... “부산 4명”>(부산MBC, 9/14)가 유일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에서 이진베이시티에 대한 특혜와 전봉민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나 이를 보도한 지역언론은 없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송도 이진더베이 인허가 과정 중 민간기업의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 민간위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전봉민 의원 일가의 문제에서 나아가 부산시의 구조적, 관행적 문제 등 추가로 집어야 할 과제를 드러낸 건데요. 그런데도 지역언론은 ‘전봉민 의원 사건’이 미칠 보궐선거 셈법에만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심층 취재로 의혹을 밝혀 나가는 주체로서의 언론을 기대합니다

.*